

전남 5개 중 1개 '무늬만 위원회'

작년 160개 중 34개·5년간 8개, 회의 한번도 안해
실적 저조 불필요한 위원회·자문기구 재정비 시급

전남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총 160개) 5개 중 1개는 '무늬만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4개에 달하는 데다, 최근 5년간 회의 실적 '제로(0)'도 8개 위원회로 파악돼 불필요한 위원회 및 자문기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16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586회 회의가 열렸다. 이는 연간 평균 3.6

회 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반면, 지난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34개로 미개최율은 21.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자문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심의위원회, 도로노선조정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2017년부터 5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경우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전남지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열 수 있지만 안전 부재 등으로 열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

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 천일염'이 태양광발전 확산으로 인해 염전 소실, 소금값 폭등 등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적지 않지만 구조적 문제로 사실상 통폐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령으로 위원회 설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 자치법규로 설치한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통폐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전남지역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도로노선조정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자치법규, 나머지 5개 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해 설치됐다. 지난 5년간 16개 위원회가 신설됐지만

폐지된 위원회는 4개, 통합된 위원회는 2개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회의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영상회의 등 운영 방식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李子장, 중앙공원 1지구 진입로 개설 민원현장 점검

광주시, 서구 화정4동서 '27번째 현장 경청의 날'
주민들 "교통체증,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 우려"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현장 민원을 경청,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제27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 서대석 서구청장, 송형일 시의원, 고경애·김영선 서구의의원,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로개설 예정부지를 둘러 본 후 주민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현재 화정4동 염화로는 우미아파트를 비롯한 10여 개의 아파

트거 밀집된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면서 "새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1지구의 도로개설 계획이 연화리로 연결돼 있어 교통정체 및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기존 우미아파트에서 연화리로 연결 계획인 도로개설 계획을 우미아파트에서 금화리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내년 7월 인근 포스코아파트 2천여 세대 입주에 따른 교통 불편과 어린이 등골길 사고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개설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일 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선 7기 광주시의 많은 성과 중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공원 1지구 도로개설 관련 문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주민들께서 도로개설과 관련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방향은 전문가 자문 결과 오히려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주민 여러분들과 협의해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구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핵심 사업지로 2020년 6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약 1년 2개월만인 지난 8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승지기자



영공 비행하는 문대통령 문대통령(앞 좌측)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참석차기에 앞서 국산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날 문대통령은 FA-50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국방부 제공>

광주시·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행정 강화

노동청·기상청·보훈청·조달청 등 9개 기관 참여

광주시에 노동청·기상청·보훈청·조달청 등 지역 특별 행정기관들은 지역 맞춤형 기관별 현안과 협업 과제를 공유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 지역 내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현안 및 협업과제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광주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협업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현안업무 및 협업과제를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기상청은 자연재해 취약지역 핀셋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지진 정보 신속전

파를 위한 기상청과 광주시의 시스템 연계, 인공지능산업 융합 집적단지 내 GPU 활용한 기상분야 기술개발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훈청은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협업,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대상 코로나 19 공동 방역체계 구축 등 협업과제를 신규 제안했다. 또 노동청은 청년일자리사업,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등 국민취업교육·프로그

램 홍보,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구매홍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MOU 체결을 통한 전당의 전시·공연 프로그램 홍보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역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및 확산 방지 등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협업회의가 광주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전통시장 노점상 지원금 50만원씩 지급

▶1면 '외국인 감염'서 계속

전남도는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전통시장 노점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 16억원을 확보, 소독안정지원자금을 각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독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해 지난 4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 정부의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전남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점상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지급 전제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노점상은 의료보험 인상, 기초생활수급

자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했다. 실제 전남지역 전통시장 노점상 3천300명 중 26명만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노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의 취지를 살리도록 신청 기피 원인인 사업자등록 전제 조건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8월 사업자등록 전제 조건을 폐지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노점 소상공인에게 정부 소득 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지급해 추석 전 1천191명에게 6억원을 지원했으며 11월까지 대상자 3천300명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중기부의 새희망 자금·버팀목 자금, 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등 기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재정기자

이날 직업소개소 전수 검사 관련 3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4명, 광주 기존 확진자 관련 5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 등 13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중 8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며 2명은 직장동료와 지인이다. 전남부터 이틀간 발생한 25명 중 18명(72%)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달 말까지 안정적 방역상황을 만들고 높은 점진률을 바탕으로 11월 초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사업장 선박 등 2주 1회 PCR 검사 대상자는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아직 접촉하지 않은 외국인 등 종사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집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